<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VI>

대산단지 부실의 원인은?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의 대산단지 석유화학 빅딜이 무산됐다고 한다. 부실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결과이니 새삼 놀랄 것은 없으나 막상 무산소식에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모양이다.

석유화학 빅딜은 1998년9월 시작됐고 관련기업들과 정부, 일본 투자자 3자간의 억지에 가까운 힘 겨루기가 계속됐을 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1년4개월만에 백지화됐다.

현대와 삼성의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실부채가 빅딜 또는 정상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은 산업계 관계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일본 투자자들과 유착된 한국 관계자들의 엉뚱한 발상과 파격적인 조건 제시,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한데 어울려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일본 Mitsui상사가 주축이 된 Mitsui 컨소시엄이 제시한 투융자 조건은 한마디로「얼토당토」않은 후안무치 바로 그것이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융자금 1500억엔을 한국산업은행 전대차관 형식으로 한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 더해 막바지에는 한국정부더러 지급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25%를 투자하면서 수출독점권을 요구하는 행태는 불평등 투자조건을 넘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경제적 성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구조조정전	구조조정후	개선효과	개선비율
자산감축	75 370	63 370	12 000	15.9%
인력감축	3 609	2 887	722	20.0
부채감축	57 010	34 500	22 510	39.5

자료) 산업자원부

그러나 빅딜이 무산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현대그룹 및 삼성그룹의 Mitsui보다도 더한 후안무치가 자리잡고 있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를 안고서도 부채 형성과정에 대한 해명은 물론 부채 해소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출자전환 및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였고,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있은 다음에야 필요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는 생색내기에 나섰을 뿐이다.

삼성과 현대는 석유화학산업계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1988년 석유화학산업에 뛰어든 이후 급격한 신증설로 공급과잉을 유발했고, 1991-93년 막대한 적자가 쌓이자 기존 석유화학기업들과 한판이 되어 1994년 3월28일 발효된「합성수지 판매 및 가격카르텔」횡포를 자행했으며, 카르텔 흑자를 바탕으로 또다시 제2 NCC 및 SM, P-X에 이르는 무자비한 투자를 감행해 오늘의 부실을 키워왔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Mitsui 컨소시엄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건 배경에는 현대그룹 및 삼성그룹의 무리한 투자를 질책하는 바탕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대규모 설비를 손에 넣겠다는 계산과 함께 비도덕적이고 사업가 정신이 결여된 각종 특혜요구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무리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했으며, 빅딜 과정에서 한몫 챙기려는 일부 친일파들이 일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이 삼성과 현대, 미쓰이의 석유화학 빅딜이 무산돼도 금융제재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쓰이 컨소시엄의 무리한 요구로 빅딜이 난항을 겪었던 만큼 삼성과 현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삼성과 현대는 석유화학 빅딜이 무산된다해도 부채비율 200% 달성 등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핵심사항을 모두 차질없이 이행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들린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니 국고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는 흐름이다. 어떻게 5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형성됐는지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도 신통치 않은 판에 면죄부를 주겠다니 어찌 황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석유화학 빅딜 무산을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위반으로 간주해 금융제재에 착수하고, 현대와 삼성이 구조조정 계획을 새로 짜야 하며, 어떤 경우든 공적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대목이 위안이 될 뿐이다.

대산단지 정상화는 부채 5조7000억원의 형성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추궁하는데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화학저널 2000/2/14>